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본격화…전담 '추진단' 가동

2609억 규모 시설현대화 등 사업비 확보 위해 내년 정부 공모 신청
2029년 중앙투자심사와 국·시비 반영이 관건…2036년 완료 목표

광주시가 이전 사업 재추진 방침을 밝힌 북구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는 이달부터 정부 재원 확보를 위해 '이전건립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가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을 다시 본격화한다.

이달 내에 농업동물정책과에 전담 '이전건립추진단'을 꾸려 상시 운영하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년 정부 공모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2609억여원 규모의 광주시 북구 각화농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이전 사업을 위한 '이전건립추진단'을 9월부터 가동한다.

각화농산물도매시장은 1991년 개장 이후 시설 노후와 교통 혼잡, 협소한 부지 때문에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호남권 최대 공영도매시장으로, 하루 평균 1만명이 이용하고 8000대 차량이 드나들며 연간 24만톤을 처리한다.

하지만, 현 부지 5만6206㎡는 광주시 서부농산물도매시장 11만2천200㎡의 절반 수준이다.

시는 2008년 시설현대화 공모에 선정됐지만 상인 반대로 착공에 이르지 못했고, 2011년 국비(보조·융자 포함) 전액을 반납해 사업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16년까지 재신청이 제한되는 '패널티'도 받았다.

2019년 이후 시는 '선(先)이전·후(後)정리' 원칙 아래 재추진에 나섰고, 2023년에는 '이전건립타당성조사·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당시 시는 총사업비를 2500억~3000억원 수준으로 가늠하며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2024년에는 후보지와 규모를 둘러싼 논의가 진전됐다. "전국 최대 35만㎡ 구상"이 축소돼 "약 21만㎡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됐고, 11월 최종 용역보고 설명회에서는 북구 개발제한구역(GB) 내 후보지 5곳과 '2032년 개장 목표' 구상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다시 이전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2609억원 규모로, 국비 691억원과 시비 996억원, 융자 922억원, 자체시비 305억 원을 투입한다.

이전 대상 시설은 부지 21만㎡, 건축 8만㎡ 이상, 지하 1층·지상 3층으로, 2000대 이상 주차공간을 마련한다. 채소·과일·물류·상가·관리동을 한데 묶는 집적형 구조로, 물류 동선 최적화와 저온·가공기능 보강이 핵심이다.

추진단은 5급 1명과 6급 2명으로 출발해 공모·예타·부지 타당성 검토, GB(개발제한구역) 해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재해영향성 평가, 중앙투자심사, 토지보상, 기존 부지 활용, 입주점포 배치 및 민원 대응까지 전주기 업무를 맡는다.

광주시 담당자는 "새로 정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기존 인력을 업무 분장해 추진단 기능을 수행한다"며 "내년 중앙부처 공모가 나오면 응모할 수 있도록 부지 선정과 의견수렴, 계획서 확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현장 이해관계자 합의와 상인 지원원칙 등도 공모·예타 단계의 전제 조건으로 다뤄진다.

2025년은 후보지 압축과 사전협의, 기본구상 보완에 집중한다. 2026년 공모 신청·선정과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과하면 2027~2028년 정부의 예비타당서 조사에서 경제·정책·지역파급효과를 검증한다.

2029년에는 중앙투자심사와 국·시비 반영이 관건이다. 2030~2034년 설계·보상·발주, 2035~2036년 착공·준공으로 이어지는 로드맵이 제시돼 있다.

그린밸트해제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등 다중 인허가가 병렬로 진행돼 병목 관리가 핵심이라는 게 시 설명이다.

재원·인허가·합의는 '3대 관문'이다. 재원 측면에선 지방부담과 922억 원 융자에 대한 상환구조·운영수지 설계가 필요하고, 인허가에선 GB 해제와 전략환경·재해영향성 평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동시진행 리스크를 제어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합의에선 이전 배치원칙과 영업손실 보전 가이드, 이주·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미리 확정해 공모·예타 심사에서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

광주시는 2008년 공모 선정 이후 상인 반대로 2011년 사업이 무산됐던 경험을 교훈 삼아 상설 협의 채널과 설명회, 맞춤형 보상·지원 원칙을 전면에 두겠다는 입장이다.

추진단은 후보지 여건과 물류 수요를 반영한 단계형 배치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고속도로 접근성·진입도로 확보·환경·재해 안전성 등을 종합평가해 최적지를 도출할 예정이다.

기존 부지의 사후 활용은 지역상권과 도시재생, 공공성·수익성 균형안을 함께 검토한다. 교통 측면에서는 대형차 동선과 야간 분산, 스마트 주차관제, 공동집배송 체계를 설계해 거래·주거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부지 선정과 계획서 확정, 공모 대응을 연쇄적으로 진행해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트럼프, 다음달 경주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 만날 것"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
"한미동맹 현실 맞게 변화해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7일 내달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한미동맹재단·주한미군전우회 주최로 열린 '한미동맹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조연설에서 "지난달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경주 APEC에서도 만나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공식 발표되진 않았지만, 기정사실이 되는 분위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방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사대리는 "이 대통령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를 요청했다. 동시에 경제와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다"며 "한미동맹은 톱 리더십부터 아래까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 안보를 증진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은 이제 새로운 위협, 새 현실에 맞춰 적응해 변화해야 한다. 이건 매우 큰 프로젝트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미가 협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윤 대사대리는 "우리는 역내를 살펴봐야 한다. 동남아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펴야 한다"며 "미국은 단순히 재정적 기여를 넘어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열린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최근 한일관계, 한미일 3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면서 "일본 제국주의가 물러가고 이젠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내밀고 협력할 시기"라며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 정부의 기여와 역할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유학생 중 한국인 학생이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고 미국 대학에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적교류는 우리 동맹강화에 있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미동맹을 주제로 한 이날 행사에선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한국인 구금사태에도 양국 간 우호관계가 훼손돼선 안된다는 다짐도 나왔다.

/연합뉴스

위성락 "한반도 비핵화, 한미 궁극 목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한반도 비핵화는 한국이나 미국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이며, 북한이 이를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 간담회에 참석해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이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먼저 중단을 시키고, 줄이고(축소), 폐기하는 수순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중단-축소-비핵화' 3단계 접근법을 거듭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실장은 "다만 (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이는 도식적인 것일 뿐 현실에서 그렇게 유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우선 가장 급한 것은 협상 과정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북중러 움직임 등 주변 정세 흐름을 보면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이유가 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럼에도 북중러와의 관계를 지금보다는 개선해야 하는 것이 우리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역시 즉각적인 호응이 없지만 우선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안보나 억지력이 손상을 받지 않는 한에서 긴장 완화 조치를 몇 가지 시행한 바 있다. 앞으로도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선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실현 가능, 지속 가능해야 하고 국익을 적절한 범위에서 방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에게 큰 손해가 되는 합의는 지속 가능하지 않고 한미 관계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감당할 수 있고 합리적인 협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